



이재명의
이스라엘 전쟁
범죄 비판
2, 3면

미국의
이란 전쟁
3~4, 6~7면

레바논
전선
5면

한국 무기 수출
세계 4위
8면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
9면

노동자 투쟁
CU 투쟁 중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10면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구속 11면
교육재정 삭감 반대 11면



삼성전자 투쟁 12면

재한 이란인이 말한다

“전쟁을 반대하는
이란인·팔레스타인인의
목소리가 돼 주세요”

관련 기사 4면



레프트미디어

한국 무기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게 놔 두면서 이스라엘 비판, 진정성 없다

김문성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발언 후에도 한국-이스라엘의 협력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무기 산업을 성공적으로 수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스라엘의 첨단 군사 기술에 주목했다.

이스라엘은 매우 군사주의적인 사회로 정부와 군, 무기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엘빗, IAI 등 민간 군사 기업, 테크니온 공대 등의 교육 기관 등을 국방부나 군 장성 출신들이 설립하거나 운영한다.

이들은 특히 점령과 학살에 필요한 기술에 특화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무기와 기술이 가진 최대 이점은 바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반복적 공격을 통해 '실전 테스트'를 거쳤다는 점이다.

즉, 이스라엘과 군사기술 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학살을 돕고 또 거기서 득을 보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편들기가 '국익'이라는 보수 측의 노골적인 주장은 인면수심 그 자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그룹의 군수 계열사들, LIG넥스원 등 이른바 K방산의 핵심 기업들이 모두 이런 기관·기업들과 기술 개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일각에선 "이스라엘의 기술과 한국 제조 역량의 결합" 운운한다.

그동안 한국의 대 이스라엘 주요 수출 품목은 포탄류라고 알려져 있다. 전쟁 범죄의 핵심 수단을 수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용 탄약과 한국 덕분에 화수분일지도 모르는 것이다!(한국 정부는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 말로만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것은 안 될 일



이다.

사실 침략 전쟁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왜 한국은 이란 침략 전쟁과 그 전쟁을 일으킨 미국을 공개 비판하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도 기업주들과 한국 국가의 전통적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

그래서 이재명의 발언이 대중적으로 환영받고 우파의 선거 전망이 불투명해도, 우파는 이런 안보 쟁점에서 결코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다. 국가와 기업의 이익이 그들 편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미셸 박 스틸 같은 반중·반북 호전 극우가 주한미국대사에 내정된 것에 고무돼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의 뻔뻔한 작태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재명의 비판이 홀로코스트를 경시하는 유대인 혐오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가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 대목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의 제노사이드(인종학살)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이 아니다. 이스라엘 건국 세력은 히틀러 치하 유대인 구하기에 진정한 관심이 없었다.

이스라엘 건국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청소 과정의 시작이었을 뿐 홀로코스트로부터의 (유대인) 구원도,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위한 서구의 보상도 아니었다.

서구 제국주의는 자신들을 중동에서 대리해 줄 국가로 이스라엘 건국을 지원했다.(심지어 소련도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했다.)

유대인 또는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하지 않는 이스라엘 국가가 '홀로코스트의 유일무이성'을 주장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인종학살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삼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극이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편드는 역겨운 우파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공개 비판한 것은 한국의 전통적 외교 노선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긴 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극도로 삼가 왔다.

한국 경제는 사활적인 석유 공급 안정성을 미국의 중동 패권 질서에 의지해 왔는데,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서 이스라엘의 구실은 갈수록 중요해져 왔다.

한국도 그 질서를 떠받치는 데에 일조해 왔다. 2000년대 이라크 등 미국의 중동 침략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했다. 걸프 연안국 중 가장 친미·친이스라엘적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유착했고, 이후 이스라엘과의 교류·협력도 크게 늘려 왔다.

이재명 본인도 야당 대표 시절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규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환대했다. 야당이라 정치적 부담이 훨씬 적었는데도 그랬

다. 이는 일본의 핵 폐수 방류 때 이재명이 한미일 군사 동맹에 반대한다고까지(지금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했던 것과 대비된다.

“침략 전쟁 부인”

그런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을 사실상 전범 국가라고 규탄한 것이다. 이란과 중동 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유가 인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원유 공급 위기 해결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온라인 발언에 맨 먼저 반응한 것은 역시 우파 정치인들이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배현진, 개혁신당 이준석 등 서로 갈등하던 우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적 행위,” “외교 참사,” “국제 망신,” “국익 훼손” 운운하며 비판에 나섰다. 물론 전광훈, 전한길, 황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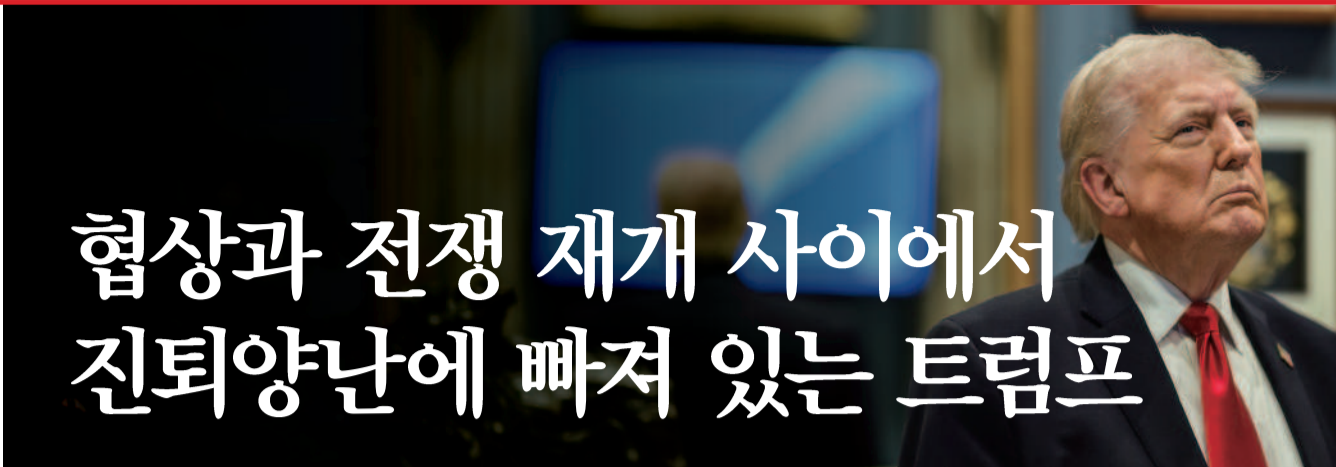
안 등도 “정신 나갔다”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이처럼 우파 정치인들이 부들부들 떠는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마당에 이스라엘 비판은 내재적 논리상 미국 규탄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우파를 반박하며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도 한 것도 신경 쓰일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약화를 막아 보려는 침략 전쟁이 오히려 미국의 헤게모니 약화를 드러냈다. 한국인을 포함한 국제적인 대중 여론도 미국-이스라엘 규탄 편이다.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력 약화는 한미동맹 질서에서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어 온 한국 지배계급이나,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우파에게는 불안하고 우려스런 일이다.



협상과 전쟁 재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트럼프

이렇게 생각한다 팔레스타인 연대와 이란 전쟁 반대 운동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외교부를 재반박하며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실상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언사다.

이재명 발언의 애초 의도가 무엇이든 그 발언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에 분노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많다는 것을 드러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그런 효과를 활용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행동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중 당장 중요한 것이 무기 수출 반대일 것이다. 팔레스타인 연대자들은 이재명 발언의 불철저함과 말과 행동의 모순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과 우호·협력 관계를 단절하라.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군사 지원 요청에 응하지 마라.

가자지구 식민 지배 계획에 협조하지 마라.

팔레스타인 연대와 반전 운동을 탄압하지 마라.

협상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 재개될 것인가? “전쟁은 불확실성의 영역”이자 “우연성의 영역”이라는 프로이센의 탁월한 군사 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그동안 트럼프의 말은 날마다 바뀌었다. 이란과의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발언을 쏟아 내다가, 이란이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을 폭격하겠다는 식이다. 그 와중에 미군은 이란 국적 화물선을 포격해 나포했다. 이란과의 대결장을 회담장이 아니라 다시 군사적 영역으로 돌려놓을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트럼프식 협박이라는 평이 흔하다. 그럴 수도 있다. 문제는 상대가 “거래의 달인”의 최후통첩(불안감에서 비롯된)을 역이용해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군의 이란 화물선 나포 직후 이란은 트럼프에 의해 20일로 예고된 회담을 거부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함들에 드론을 발사했다.

그래서 군사력의 압도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을 격파하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트럼프 정부가 군사력을 투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핵심 문제다.

그래서 협상을 낙관하는 말을 내뱉으면서도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의 호통과 욕설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제한다면 그것은 미국에게 굴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은 반드시 열려야 하는 에너지 병목 지점이다.

반면,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지렛대다. 이란은 세계 석유 및 가스 공급의 급소를 장악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는, (트럼프가 2월 말에 시작했으나 고전하고 있는) 이란 전쟁의 역학을 바꾸려는 시도다. 트럼프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해협 통제 능력을 과소평가했었다. 그러나 이란 지도부에게 이 전쟁은 정권의 생

존이 걸린 실존적 전투다. 그래서 이란 정권은 미국과 그 동맹국, 세계 경제가 치를 비용을 높이는 것을 전쟁의 주요 목표 하나로 삼았다.

트럼프의 역봉쇄는 에너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란의 석유 수출을 허용해 왔던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작전은 오히려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상태를 연장시키고 있다. 카타르와 바레인 이어 쿠웨이트도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파티 비롤은 이란 전쟁이 “역사상 최대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손실량이 수년간의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 침체, 연료 배급제를 촉발했던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4월 초 아일랜드에서는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도로와 항구를 봉쇄해, 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는 한편 유류세를 인하해야 했다. 아일랜드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는 무엇보다도 실행상 어려움이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강경 집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봉쇄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전 수칙을 정하지 않았다”고 알자지라에 밝혔다.

그리고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고 통과하려는 배가 걸프 국가나 프랑스 선박이라면, 또는 중국 선박이라면 그 유조선을 나포할 것인가?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티’의 군사 분석 책임자 제니퍼 캐버너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좌절감과 대안 부재감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파이낸셜 타임스〉, 4월 12일 자).

트럼프는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전쟁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서아시아에서의 지배력 약화를 만회할 수단이 군사력 말고는 달리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군사력을 통한 이란 정권 굴복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었다면 진작에 시도됐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군 지휘부는 아라비아해에 해군력을 추가로 파견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해군력을 파괴했다고 허세를 부렸다. 그러나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은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아프리카로 우회해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다.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피하기 위해서다.

중국

트럼프의 이런 진퇴양난을 트럼프의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베냐민 네타냐후의 꼬드김 탓으로 돌리는 논평들을 심심찮게 본다. 트럼프가 타인에 대한 공감 장애 성향이 있고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제국주의의 역사적 약화와 변화를 지도자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부수적 외국 지도자의 영향력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극도로 피상적이다.

트럼프의 광기는 쇠퇴하는 강대국의 근경과 좌절의 표현이다. 미국은 압도적으로 강력한 군사 강국이지만, 중국의 부상에 직면해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권력자들 중에는 트럼프의 스타일이나 오판에 불만을 품는 자들이 많지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통치 행위가 아닌 마땅한 대안도 없다.

게다가 미국 권력자들은 또 다른 전쟁 동력인 이스라엘의 확장주의에 대해서도 대체로 옹호한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야기하는 경제적 혼돈이 세계 지배자들을 덮고 있지만 중동에서 “끝없는 전쟁”이 지속될 위험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협상하라’가 지배자들의 표준이 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 국가도 그 중요한 일부가 됐다.

이란, 레바논, 팔레스타인을 트럼프의 베트남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글로벌 반전 운동이다.

재한 이란인 소니아 씨가 말하는 트럼프의 침략 전쟁과 현지 상황 그리고 반전 운동

이란인 소니아 씨는 12년째 한국에서 살며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이 주최한 4월 4일 집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을 규탄하는 연설한 바 있다. 이 인터뷰는 4월 18일에 이뤄졌다.

이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 등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2주 전, 그러니까 휴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모한테 연락이 온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모가 사는 도시에 미사일이 떨어졌지만 다들 무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모네는 테헤란에서 떨어진 이란 북부에 살고 있는데도 폭격을 당했다고 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을 때 생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식료품 가격 등 인플레이션이 계속 악화됐을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경제가 나아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트럼프는 협상을 통한 종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참전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종전 후 ‘방어적’ 군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전쟁 첫날부터 전쟁이 끝났고 자신이 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란 군대가 박살 났고 핵 능력이 초토화됐다는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처럼 위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모순되는 얘기도 많이 하는 자입니다. 저는 별로 낙관하지 않습니다.

설령 미국이 전쟁을 멈추고 이란과 우호적 외교 관계를 맺더라도 이스라엘이 또 다른 구실로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말씀하신 유럽 국가들의 계획은 별로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때처럼 이번 전쟁도 이란인들의 자유가 더 억압받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미나브의 초등학생들을 기억하라”

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것일 뿐이야’라는 가면을 쓰고 군함을 보낼 것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천 년 동안 이란이 통제해 왔습니다. 그런 곳에 서방 국가들이 와서 ‘국제 항로 보호’를 말하는 것은 식민 지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전쟁은 이란 민주주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전쟁으로 민주화를 이룬 곳이 있던 건가요? 한국도 미국의 역할로 북한과 나뉘었지만 그것이 민주화에 도움이 됐던가요? 역사책을 보면 한국은 이후 약 48년 동안 3명의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 고물가에 항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폭탄과 미사일을 피하고, 환자와 노약자를 위한 약을 구하는 일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운동의 많은 활동가와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있고, 감옥 내 상황은 끔찍하다고 합니다. 처형도 이뤄집니다. 인권 활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나르케스 모하마디는 [지난해 12월 재구속돼]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정권이 타도되기는커녕 오히려 군사 정권화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최고지도자에서 혁명수비대로

넘어간 것 같은데, 혁명수비대는 거리에서 시위대를 살해한 바로 그 세력입니다. 마치 1980년대 초 이란-이라크 전쟁 때처럼 전쟁은 이란인들의 자유가 더 억압받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석기 시대”를 운운하며 폭격을 예고했을 때 많은 이란인, 특히 여성들이 정부의 호소 아래 발전소와 다리에 모여 인간띠를 형성한 것은 큰 뉴스가 됐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란인들과 정권은 하나’라는 시각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이 비인간적으로 민간인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난하는데요.

이란은 인구가 9,000만 명이나 되고 이들 중에는 [친정부 민병대] 바시즈 대원들, 혁명수비대의 가족들, 1979년 혁명을 지지해서나 종교적 이유로 정권에 충성하는 이란인들이 있습니다. 이란에 정권 지지 세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란인들도 발전소와 다리를 지키려 적지 않게 나갈 것 같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정치적으로 누구 편인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우리 나라를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정서가 컸습니다.

이란 정권이 민간인을 강제로 혹은 돈을 주고 불러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저 나라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인과 유학생, 이주민들이 함께 시작한 이 운동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게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당시 제가 흥대의 화장품 가게에서 일할 때, 홍콩 또는 대만 문제를 놓고 시위가 있었는데 가게 주인이 “다른 나라 문제로 시위할 거면 그 나라 가서 해라” 하며 짜증 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운동을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 삼성과 LG에 다니며 자기네 식구를 위한 것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지금 중동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란과의 휴전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고 이스라엘이 점령하려는 레바논 남부와 가자지구도 특히 위태롭습니다. 이란인들의 목소리, 레바논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가 돼 주십시오.

인터뷰·정리 김종환

레바논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주도면밀하게 파괴하려 합니다”

4월 16일 목요일 자정 레바논-이스라엘의 10일간 ‘휴전’이 발효되자 레바논에서는 환호가 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레바논 안에 이스라엘 군대를 남겨 놓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레바논 영토 안에 “광범위한” 점령 지역을 두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자행한 일을 레바논에서도 벌이려 한다. 네타냐후는 레바논 국경 안으로 최대 10킬로미터까지 파고드는 ‘완충 지대’를 확보해 이스라엘군을 장기간 주둔시키려 해 왔다. 거기에 더해 네타냐후는 리타니강 이남의 레바논 남부 일대를 계속 군사 작전 구역으로 삼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이 테러 국가 이스라엘과 공모해 저항 세력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려 한다.

3월 2일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세로 레바논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2,000명이 사망했다. 그중 165명이 어린이이다. 약 120만 명이 피란민이 됐다. 전체 인구가 6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스라엘군은 구호 노동자들과 보건 노동자들을 표적 공격해 왔다.

수도 베이루트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인 갓산 씨는 이렇게 전했다. “수요일 그들은 ‘평화를 지지하는 세대들’(GFP)과 어떤 팔레스타인 NGO가 보내 온 구호품을 운송하던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제가 있던 곳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폭탄이 투하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출퇴근 시간대에 인파가 붐빌 때 시장 터를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차들과 상점들이 파괴된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타격한 주요 창고는 제과점에서 쓰던 창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농업을 파괴하려 하고 농작물에 살충제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식량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



사진 출처: Guy Smallman / Socialist Worker

3월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세로 레바논인 120만 명이 피란민이 됐다

으면 우리는 기아에 직면할 것입니다.”

갓산 씨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지상군 전면 침공을 막아 냈다고 설명했다.

갓산 씨는 많은 레바논인들이 피란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심중팔구 유일하게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연대가 압도적입니다. 어느 때보다 크고 탈중심적입니다.”

“이전 공격 때는 한두 단체가 피란민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두가 조직화해 피란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당들이 공동 부엌으로 전환됐고 청년 단체들이 물자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갓산 씨는 사람들이 티레시(市)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티레시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극심했던 곳이다.

그러나 구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때문에 물자를 전달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귀환

휴전이 선언되자 피란민들은 레바논 남부로 돌아갈지 고민하고 있다. 베이루트에 난민촌을 차린 사람들의 일부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없다.

4월 17일 금요일 레바논 정부군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이미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여러 차례 기록됐고, 여러 마을을 겨냥한 포

격이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가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했다. 휴전을 촉구하던 이란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서다.

4월 14일 화요일 워싱턴 DC에서 레바논 대사와 이스라엘 대사가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의 주재 하에 회담했다. 레바논 관리와 이스라엘 관리의 회담은 30년 만의 일이다.

한 미국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과 전쟁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두 이웃 나라가 협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레바논의 친미 대통령 조제프 아운은 도널드 트럼프와 대화를 나눈 뒤 휴전에 동의했다.

아운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추진해 왔다. 지난달 아운은 헤즈볼라의 군사 활동을 금지했다. 그러나 레바논 국가는 레바논 국민들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주지도 않고, 피란민을 지원하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많은 레바논 사람들이 자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협상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러한 협상은 팔레스타인에서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수십 년 동안 레바논을 공격해 온 국가와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갓산 씨는 이렇게 전했다. “베이루트에서는 협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매일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즈볼라 지지입니다. 그러나 좌파 단체들도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시위대에 뒤섞여 있습니다. 헤즈볼라 깃발도 보이고 팔레스타인 깃발도 보입니다.

“사람들은 협상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고 인종학살에 반대합니다.”

헤즈볼라는 협상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에 군사적으로 저항할 자신의 권리를 옹호했다. 지난주 초 헤즈볼라 정치평의회 부위원장 마흐무드 카마티는 이렇게 강조했다.

“점령이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정당한 저항권이 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다.”

갓산 씨는 레바논 국가가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종파 간 분열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레바논 정부는 군부를 압박해서 내전을 일으키도록 하려 합니다.”

위험

지난주에는 ‘레바논군’[레바논 극우 조직의 이름이다 — 역자] 간부 피에르 무아와드의 장례식이 열렸다. 무아와드는 주민 다수가 기독교인인 베이루트 인근의 도시 아인 사아테흐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 아내와 다른 여성 한 명과 함께 사망했다. 그 폭격은 헤즈볼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군’은 정부에 네 명의 장관을 두고 있는 기독교인 극우 조직이다. ‘레바논군’ 지지자들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긴장을 부추겼으며 헤즈볼라를 탓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온 피란민들을 헤즈볼라 지지자라고 비난한다.

무아와드의 장례식에서 ‘레바논군’은 자신의 세를 과시했다.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총을 쏘고 대형 스피커로 음악을 틀었다.

이스라엘의 점령과 레바논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맞선 저항은 종파 간 분단을 가로지르는 단결을 이뤄 낼 수 있다.

갓산(커밀라 로일의 인터뷰)

출처 Camilla Royle & Ghassan, “Lebanon ceasefire: ‘Israel is deliberately attempting to destroy us’” (2026. 4. 17) / 번역 이원웅

드론 — 21세기 전장의 신무기

유리 프라스드

제국의 역사에 정통하거나 하다못해 구약성서를 접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패턴이 낯익을 것이다.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통치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갖고도 전장에서 허를 찔려 보다 작고 약해 보이는 적수에게 참패하는 패턴 말이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 겪은 수모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빗댄다면, 드론은 그 비유를 뒷받침하는 가장 대중적인 상징[다윗의 돌팔매]에 해당된다.

2020년대 초 이란이 개발한 샤헤드-136 드론은, 발사나무와 모형 비행기 엔진 등 이란 내에서 조달한 부품과 자재를 이용해 만든 단순한 무기다.

애초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 드론을 “쏘고 잊어버리는”[목표물 명중을 기대하지 않는] 아마추어 수준의 무기로 취급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군사 보고서에서는 이 드론에 대한 평가가 크게 상향 조정됐다.

무기 애호가들의 연구 웹사이트 ‘드론 워퍼’는 이렇게 논평했다. “샤헤드-136은 단순한 GPS 유도식 배회형 무기에서, 중계 지원을 통한 궤도 수정과 메시네트워크 기반 지휘·협응이 가능한 네트워크형 무기 체계로 진화했다.”

쉽게 말해, 샤헤드 드론은 성능이 탁월한 무기다.

드론 수백 대가 협응해 특정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심지어 제어 신호가 방해 전파로 교란되면 스스로 표적을 설정할 수도 있다.

샤헤드 드론은 사거리가 최대 1,600킬로미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제국주의 전쟁에서 이 드론을 이용했고, 거기서 터득한 실전 운용 기술과 개선 사항을

드론에 희망을 건 이란의 군사 전략가들은 “비대칭 전쟁”을 수행하게 됐다. 그 목표는 상대가 경제·군사·정치적 비용을 더는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란에 상세히 피드백 해 줬다.

이제 샤헤드 드론의 몇몇 파생형에는 적의 제어권 교란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 회로 대신 광섬유 기술이 적용된다.

이란 드론의 성능이 어찌나 좋은지 미국 무기 기업 한 곳이 이란 드론을 포획해 역설계한 후 ‘루카스’라는 이름을 붙여 생산해 서방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이란은 타국의 대량 폭격에 대응해 중동 전역의 군사·경제 기반 시설을 표적 타격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대당] 2만~5만 달러짜리 샤헤드 드론을 대량 생산했다.

비대칭 전쟁

드론에 희망을 건 이란의 군사 전략가들은 “비대칭 전쟁”을 수행하게 됐다. 비대칭 전쟁이란 상대적으로 열세인 측이 적과의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펼치는 전쟁 수행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과거에 그랬듯 지금도 비대칭 전쟁의 목표는 상대가 경제·군사·정치적 비용을 더는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설령 그 상대가 이란보다 군비를 10배 넘게 쏟아붓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량 폭격에 맞서 이란은 중동 곳곳의 군부대, 에너지·교통 인프라 등을 겨냥해 엄청난 숫자의 드론을 발사했다.

서방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훈련시킨 조종사가 모는 대당 2,000만 달러가 넘는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한 발당 4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아 이란의 이 저가형 드론을 격추하려 했다.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응해 서방의 중동 동맹국들은 한 발당 370만~700만 달러에 이르는 “방어용 무기” 패트리엇 미사일을 쏘았다. 미국이 개전 후 96시간 동안 쏜 패트리엇 미사일만 325기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소모다.

‘거대한 분노’ 작전은 이미 공급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에 비축해 둔 무기들을 끌어다 쓰고 있다.

지금까지 1,000발을 훌쩍 넘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소모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란 전쟁에 미국이 쏟아붓는 전쟁



이란의 비대칭 전쟁 수행에 핵심이 된 저가형 드론 샤헤드-136

비용은 매일 약 8억 9,100만 달러에 이른다.

3월에 백악관이 하원에 추가 전비 2,000억 달러를 요청해야 했던 것도 놀랍지 않다.

군비가 치솟는 와중에 물가가 급등하고 일자리와 복지가 사라지는 상황을 미국 대중은 얼마나 오래 더 참을 수 있을까?

이란 정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심지어 미국측이 주장하는 샤헤드 드론 “격추율” 90퍼센트라는 수치도 보기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다.

격추율 90퍼센트란 이란이 표적에 드론 100기를 쏘면 그 중 10대만 미국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뜻인데, 그 열 대만으로도 불비례하게 커다란 경제적·사회적 재앙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란은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를 타격해 대당 3억 달러에 이르는 미군의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를 파괴했다. 또 대당 8,000만 달러에 이르는 KC-135 공중급유기 다섯 대를 완파 혹은 파손시켰다.

또 이란은 드론으로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기지를 타격해 대형 통신 센터를 파괴했다.

그밖에도 이란이 드론으로 오만·카

타르·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뉴욕 타임스》 신문은 보도했다.

이란의 공격 때문에 UAE의 도시 두바이에 터를 잡고 있던 영국의 조세 회피 기업들도 안전한 “모국”으로 도망쳐야 했다.

국제관계학 교수 드니스 가르시아는 “불일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강대국들은 거대한 항공모함과 전투기와 값비싼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현재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저렴한 드론이다. 이는 비대칭 전쟁이 가장 잘 수행된 사례다.”

이란 “문명 전체를 파괴”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에 대비해 이란 정권은 이른바 “모자이크 독트린” 체계에 따라 드론 작전 본부를 분산시켜 왔다.

학술지 《유라시아 리뷰》는 이란 정권이 지휘·통솔 체계를 31개의 자율성이 큰 단위로 재조직했다고 분석했다.

각 단위에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령부와 자체 미사일·드론·정보·지휘 체계가 있다.”

《유라시아 리뷰》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이란의 전략 목표는 미국·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오직 생존을 목표로 비대칭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다.”



한 발당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사진 출처: 록히드 마틴



속속들이 수모를 당한 미국

한때 미국이 지배했지만 이제는 이란이 통달한 기술에 드론만 있는 것이 아니다.

테헤란에 기반을 둔 언론 '익스플로시브 뉴스'는 "레고 영상"을 제작해 수백만 조회 수를 얻고 있다.

그 "레고 영상"은 트럼프와 트럼프의 측근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미국 제국주의를 조롱하고 이란의 군사적 승리를 찬양하는 짧은 영상들이다.

한 영상은 레고 형상의 트럼프가 제프리 엡스틴 파일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사진을 보는 장면을 담고 있다.

다음 장면에서 그 레고 트럼프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를 타격해 100명 넘는 학생들을 죽이는 것으로 세간의 이목을 엡스틴 파일에서 멀어지게 한다.

또 다른 영상에서 [레고] 트럼프는 이란이 미군의 F-15 전투기를 격추한 데에 격분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추락한 전투기에서 탈출한 미 공군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트럼프와 수많은 레고 형상의 이란인들 사이에 경주가 벌어진다.

이란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익스플로시브 뉴스'의 영상들을 퍼 나르고 있지만, 그 영상들은 자력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왕은 없다' 시위 참가자 중 몇몇은 그 영상에 나오는 레고 트럼프 캐릭터의 영영이에 붙여 붙은 그림을 현수막으로 들고 행진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시 생성 저질 프로파간다와 달리, '익스플로시브 뉴스'의 영상들은 진짜로 재미있다.

'익스플로시브 뉴스' 구성원 중 한 명은 자신들을 "사회 운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이끄는 미디어 팀"이라고 묘사한다.

그는 팀원들이 모두 자기 정체를 감추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거둔 성공 때문에 미국-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재미난 역설은, 우리가 다닌 이란의 유사 깊은 대학 중 몇몇이 폭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과학과 문화에 보낸 대단하신 '선물'인 겁니다!"

이란 국가는 미국 제국주의를 흔들고 수모를 안길 수 있다

본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군사적 패배를 겪기를 바라지만, 이란 정권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란 국가는 나름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지역 강국이지, 원칙 있고 일관된 반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대의에 대한 이란의 지지는 한계가 분명했다. 인종학살이 벌어질 동안 이란은 이스

라엘에 대한 공격을 자제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은 예컨대 2023년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었다.

이란은 시리아에서 잔혹한 아사드 독재 정권을 비호할 때 드론을 실전에 투입해 테스트했다.

제국주의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가하려면 중동 사람들의 사회적 항쟁이 필요하다. 제국주의자들과, 부패하고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을 모두 몰아낼 항쟁 말이다.

군비 경쟁

이란이 드론의 우월성에 힘입어 중동에 있는 서방의 자산을 타격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세계 주요 강대국 모두가 그들만의 사해드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해, 다른 국가의 드론을 공격하러 벌떼처럼 달려들 드론 편대를 꾸리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 미국 국방부는

10억 달러가 배정된 "드론 우위 확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의 목표는 2028년까지 30만 대 넘는 저가형 공격 드론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8개월도 안 돼 미국은 사해드 드론의 미국판 파생종인 루카스 드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루카스 드론은 2026년 2월 대(對) 이란 전투에 최초로 실전 투입됐다.

'비대칭 전쟁'이란 무엇인가?

"비대칭 전쟁"이라는 용어는 제2차세계 대전 종전 후 식민지 해방 전쟁들이 벌어지고 유럽 제국들이 쇠락하며 등장했다.

그런 독립 전쟁에서는, 대개 무장 수준이 형편없는 전사들이 식민 지배에 대한 대중의 거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전투를 치렀다.

그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 산업국들에 맹공을 퍼부어 승리를 쟁취했다.

기존의 국수주의적 통념은 무장·훈련에서 우위인 측이 설령 숫적으로 열세일지라도 어떤 전투에서든 승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인도차이나반도, 인도네시아, 알제리, 키프로스, 아덴, 모로코, 튀지니에서 완전히 깨졌다.

예컨대 프랑스는 고작 1만 5,000 병력으로 인도차이나반도의 대중을 60년 넘게 강압 통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6년에 베트남인들이 게릴라 투쟁을 시작하자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다.

1954년에 그 게릴라 전사들은 프랑스에 굴욕을 안겨 줬다. 당시 프랑스군은 병력을 20만 명까지 늘렸는데도 말이다.

그로부터 20년도 안돼, 장거리 폭격기와 헬리콥터, 50만 병력을 자랑한 강대한 미군도 프랑스와 같은 굴욕을 당했다. 저술가 앤드류 맥은 《큰 나라가 작은

전쟁에서 지는 이유》에서 반군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유용하게 요약했다.

"모든 경우에서 반군이 승리하는 비결은 전장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데에 있지 않았다. 군사적 승리가 보조적 구실을 했을 수는 있지만 말이다.

"진짜 비결은, 적들이 전쟁을 수행할 정치적 역량을 점진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비대칭적 전쟁에서는 반군이 군사적 교착 상태, 심지어 군사적 패배 상황에서도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트럼프가 끝내겠다고 약속했던 "영원한 전쟁"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조짐이 있다. 그러나 이미 심각한 고난에 신음하는 미국인들이 그런 전쟁을 지지할 것 같지는 않다.

올해 초 아래로부터 항쟁으로 타격을 입은 이란 정권은 과거 민족 해방 운동들이 동원할 수 있었던 대중적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덕에 이란 정권은 그 전까지 잃고 있던 통치 정당성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출처 Yuri Prasad, 'Drones - weapon of 21st century battlefields' (2026. 4. 14) 번역 김준호

한국 무기 수출 세계 4위 누구를 위한 “방산 4대 강국”인가?

이재혁

2025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이 6퍼센트로 4위에 올랐다.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은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세계 2위다.

2024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3.6퍼센트로 8위였다. 한 해 만에 점유율이 80퍼센트 늘어나고 순위가 네 단계나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군사적 충돌이 늘어나는 국제 정세 속에서 'K-방산'을 세계 무기 공급망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하려 한다.

누구에게 이익인가?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기 산업 지원을 정당화한다.

그런데 무기 산업의 성장에서 얻는다는 '국익'은 실은 지배 계급의 이익이다.

첫째, 한국 무기 산업의 성장은 대대적 군비 증강과 직접 맞닿아 있다.

둘째, 한국산 무기가 세계 무기 공급망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것은 한국 국가의 정치적(그리고 군사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한국 국가의 위상은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무기 기업들의 이익이다.

반면, 한국의 군비 증강과 한국산 무기 수출은 한국 노동자들을 포함한 국제 노동계급의 이익을 거스른다.

첫째, 한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은 오늘날 심화되는 군비 경쟁, 전쟁



'K-방산'의 성장은 대대적 군비 증강과 직접 맞닿아 있다. KF-21 전투기 출고식에서 연설하는 이재명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한다. 걸프 국들이나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무기 수출은 각각 중동과 유럽에서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한다.

둘째, 무기 수출은 한국을 해외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얽히게 한다.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미국의 이란 전쟁에서 천군-2가 실전 투입된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 활동하는 나라들과 광범한 상업·산업·군사 공급 관계를 구축하는 나라는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더 노출되기 마련이다.”

셋째, 군비 증강에 드는 정부 예산은 복지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잠식한다.

예컨대,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7.5퍼센트 증가한 65조 8,642억 원이

다. 무기 수출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35.7퍼센트나 증가한 5,345억 원이다. 반면, 치매 노인 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 체계구축' 예산은 올해 1,782억 원인데, 지난해 대비 7.2퍼센트 삭감됐다.

이재명 정부는 K-방산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의 무기 산업은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보건·의료·교육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무기 산업보다 크다는 미국 브라운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숫자의 일자리라면 보건·의료·교육의 일자리가 비할 바 없이 사회에 이로운 것 아닌가.

일자리 창출 운운은 장기 침체 속에서 군비 증강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감언이설이다.

'방산 대박'은 노동계급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 오히려 손해다. 반전 운동과 노동자 운동은 무기 개발·생산·축적·수출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복지를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임무

국제 반전 운동의 관점에서, 한국 무기 산업의 급성장은 한국의 반전 운동

에 중요한 정치적 책무를 제기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군사적 충돌에 한국산 무기가 공급·사용되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전 운동은 군사적 침략이나 (가령 팔레스타인인들) 학살에 무기를 수출하지 말라는 목소리와 행동을 키워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이란 전쟁을 돕는 걸프 연안국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행동이 커져야 한다.

또, 노동자들은 무기 수출을 실제로 막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생산과 물류를 멈출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들이 군사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 것이 당장 가능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탈리아, 그리스, 모로코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은 중요한 정치적 영감을 준다. 당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수송을 막는 파업을 벌이며 항만, 철도, 도로를 멈춰 세웠다.

본지 독자들은 한국에서도 그런 투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전망 속에서 거리와 작업장에서 반전 운동을 끈기 있게 건설해야 한다.



군사적 침략이나 학살에 무기를 수출하지 말라는 목소리와 행동을 키워야 한다



한국군사력

자본주의 국가들 간 경쟁 시스템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은 서로를 뒷받침한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무기 산업과 자본주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군비 지출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비합리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 경쟁의 본질적 일부인지를 두고 오랜 논쟁이 있었다.

미국의 이란 전쟁으로 말미암은 에너지 공급 위기와 물가 급등으로 세계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면, 전쟁은 대다수 기업들에게는 마치 손해인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에서 이익을 얻는 무기 기업들의 탐욕과 이윤 추구가 전쟁을 추동하는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던 대표적 인물로 20세기 초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자 카를 카우츠키가 있다.

카우츠키는 금융 자본가들이 해외 투자를 방어하려고 무기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군비 지출과 전쟁이 비합리적인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생산적 부문에 의해 거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시 전쟁이 터지는 것을 산업 부문이 막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카우츠키가 이러한 ‘초제국주의’ 이론을 담은 글을 발표한 것은 제1차세계대전을 몇 주 앞둔 시점에서였다.

물론 무기 기업들은 ‘전쟁 특수’로 커다란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득을 얻는 것과 전쟁을 추동하는 것은 다소 구별되는 문제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보지 말아야

무기 산업은 제국주의 간 경쟁과 전쟁에서 비롯한 결과이지 그것들의 원인이 아니다.

19세기 말 이후 세계 자본주의에서는 자본들 간 경제적 경쟁과 국가들 간 군사적 경쟁이 융합됐다. 거대 기업들과 유착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정치적(군사적) 경쟁을 벌이는 체제를 부하린과 레닌은 ‘제국주의’라고 불렀다.

자본주의 국가들 간 경쟁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은 서로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은 세계적인 경제적 경쟁을 고려해서라도 군비 증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다.

러시아 혁명가 니콜라이 부하린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1916)에서 설명했듯, “무기의 존재가 전쟁의 주요 원인이나 동력이 아니라(물론 무기 없이는 전쟁할 수 없지만), 반대로 경제적 갈등의 불가피성이 무기의 존재 조건이다.”

전쟁에 대한 반대와 ‘죽음의 상인들’(방위산업체를 가리키는 말)에 대한 분노와 항의는 궁극적으로 무기 산업을 낳는 제국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1911년 폴란드계 유대인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평화 유토피아’(1911)에서 강조한 바는 오늘날 반전·반군사주의 운동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군사주의는 어느 형태이든 — 전쟁이든 무장한 평화든 — 자본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며, 오직 자본주의를 파괴해야만 극복될 수 있다.

“세계 평화와 막대한 군비 부담으로부터의 해방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사회주의도 바라는 사람이다.”

.....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조사에 성소수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2,495명, 만 16~18세 청소년 457명).

현재 국내에는 성소수자에 관한 국가 통계가 거의 없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이 같은 가구원을 배우자나 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다.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 항목을 넣으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가 통계의 부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없는 셈 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대규모 실태조사는 의미 있는 일이다.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처음 인식한 시기는 평균 14.5세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좀 더 이른 12.8세다. 자신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시기는 평균 17.5세다. 인식과 수용 사이의 격차는 성소수자 차별 현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응답자 집단의 경우 성인 집단보다 정체성을 인식하고(평균 13.1세) 수용하는 시기(평균 14.5세)가 더 이르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더 많이 드러나고, 대중적 인식이 개선된 것이 그 시기를 앞당겼을 듯하다.

실제로 성소수자 대부분(91.9퍼센트)이 커밍아웃을 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청소년의 경우 86.2퍼센트). 커밍아웃 대상은 주로 친구나 동료였다.

그럼에도 성소수자들은 학교, 직장, 관공서, 의료기관, 일상생활 전반에서 여전히 심각한 차별과 혐오에 부딪치고 있었다.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인식·수용하게 되는 시기인 10대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는 성소수자 우호적 공간이 아니다(83.4퍼센트). 성별 이분법에 따라 짜인 학교 시설과 제도는 성소수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관련 교육도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있더라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오히려 편견을 강화하는 문제적인 경우도 있었다.

또, 청소년의 71.1퍼센트가 교사로부터, 87퍼센트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편견이나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를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 밝

힌 청소년도 절반에 가깝다(48.6퍼센트).

청소년 성소수자 5명 중 1명은 학교를 떠난 경험이 있다(17.4퍼센트). 이는 전체 청소년(2024년 학업 중단율)의 17배나 되는 수치다. 그들 중 75.9퍼센트는 은둔 경험이 있다.

성소수자 대부분은 직장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숨기며 살아간다(90.8퍼센트). 이를 위한 가장 빈번한 행동 하나는 연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화장실 사용을 피하거나, 옷차림에 신경 쓰거나, 목소리나 태도를 조절하는 일이 두드러졌다.

직장을 다니는 성소수자의 65.4퍼센트가 직장 내에서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트랜스젠더인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78.9퍼센트).

구직을 할 때에도 절반에 가까운 47.1퍼센트의 성소수자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력이나 개인적 배경을 숨겼다. 직업의 폭을 스스로 제한한 경우도 30퍼센트나 됐다.

이런 현실은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드러났다. 성소수자의 우울 의심 증상은 일반 인구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성인 45.8퍼센트). 자살 생각 경험률(39.1퍼센트)도 성인 일반 인구(4.6퍼센트)의 8.5배나 된다. 청소년의 경우 우울 증상 의심 비율이 성인보다 훨씬 높았다(69.0퍼센트).

성소수자들은 주류 양대 정당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퇴보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민주당이 성소수자에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비율이(70.5퍼센트) 11년 전(53.4퍼센트)에 비해 크게 늘었다. 향후 5년간 정치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다른 분야에 비해 적었다(29.5 퍼센트). 학교는 개선 기대가 적은 또 다른 곳이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 일상 속 사람들의 태도, 언론·대중매체 등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보다 높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견고한 구조적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 줬다.

성지현

성명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의 죽음에 책임 있는 CU와 경찰을 강력 규탄한다

4월 20일 오전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소속 서광석 조합원이 경남 CU진주물류센터 파업 현장에서 사용자 측의 대체 수송 차량에 깔려 사망했다.

서광석 조합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CU 사용자 측의 대체 수송 강행과 원청 책임 회피, 그리고 기업 이윤 보호에만 열중한 경찰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다.

이날 오전 CU진주물류센터에서는 파업중인 CU 배송 노동자들과 연대하러 온 화물노동자 40여 명이 사용자 측의 대체 차량 출고와 배송 강행을 저지하고 있었다. 서광석 조합원도 그 중 한 명이었다.

CU 사용자 측과 경찰은 연좌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대체 차량 출차를 강행했다.

경찰에 밀려난 노동자들은 대체 차량이 정문을 통과하자 이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대체 차량들은 사람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 대체 차량을 막으려 했던 서광석 조합원을 대체 차량이 깔아뭉갰다. 앞에서 참혹한 사고가 났는데도 뒤따라 나오던 대체 차량들은 줄줄이 쓴살같이 공장을 빠져나갔다. 돈 벌이에 혈안이 돼 노동자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모르쇠

CU 배송 노동자들은 CU가 편의점 업계 매출 선두에 오르는 동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명절에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고 4월 5일부터 원청을 상대로 첫 파업이 나섰다.

그러나 파업이 보름을 넘기는 동안, CU 원청(운영사 BGF리테일, 물류회사 BGF로지스)은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파괴에 골몰했다. 거듭된 교섭 요구에는 모르쇠였고, 대체 수송을 시도했다.

지금 사용자들은 경제 위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다. CU자본도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를 걱정하며 강경하게 나왔다. 유통업계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노동 존중'이란 말인가

최초로 원청 교섭에 나설 경우의 파장까지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지는 노란봉투법도 완전히 무시했다. 교섭 거부는 물론 파업 전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에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4월 17일부터 파업 노동자들의 CU 간편식 생산 공장(진천 BGF푸드) 봉쇄 행동으로 편의점 공급 차질이 좀 더 심각해지자, 사용자 측은 파렴치하게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또, 사용자 측은 경찰이 무르게 대응한다며 경찰력 투입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찰은 이에 화답했고, 결국 참사가 벌어졌다.

서광석 조합원의 죽음은 명백히 사용자 측과 경찰에 책임이 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노동 존중'이란 말인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의왕 ICD에서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간담회를 했다. 하지만 생계비 위기에 처한 화물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 사용자 측을 비호하고 노동자

들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화물 노동자가 사망했다.

고물가, 고유가 상황은 노동자들의 생계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전쟁의 경제적 여파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서광석 조합원은 CU 배송 노동자 투쟁이 단지 한 사업장만의 투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투쟁의 승리를 위해 연대 투쟁에 나섰다.

참변 직후 화물연대본부는 전 조합원에게 CU진주물류센터 집결 지침을 내리고 비상 투쟁에 들어갔다.

서광석 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묻고, CU 배송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껏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서광석 조합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2026년 4월 20일
노동자연대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서부

시와 로봇의 시대, 노동의 종말?

일시 4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 전문 통역사의 영어동시통역 제공

장소 서울 한빛빌딩 A동 2층 강의실60 (홍대입구역 4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강동호 <노동자 연대> 경제 담당 기자

참가비 4,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서울 동부

시와 로봇의 시대, 노동의 종말?

일시 4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 전문 통역사의 영어동시통역 제공

장소 서울 웨스턴코업호텔&레지던스 지하 1층 컨퍼런스룸A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발제 강동호 <노동자 연대> 경제 담당 기자

참가비 6,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5044-6017 / s-east@ws.or.kr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은 감옥이 아니라 현장에서 돌아와야 한다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조합원, 해고자

고진수 동지를 봐 온 지 어느덧 25년이 넘었다. 같이 노조 활동을 하고 세종호텔 투쟁과 연대 활동도 해왔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어느 누구보다 연대 투쟁에 진심인 정말 훌륭한 동지이다.

이번에도 지해복 해직 교사 투쟁에 연대하다가 연행이 됐다. 결국 구속이 됐고, 4월 20일 구치소로 이감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진수 동지를 구속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고진수 동지가 연행됐을 때 법원은 '도주 위험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그래 놓고 갑자기 말이 바뀐 것이다.

세종호텔로 복직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계속 싸워 온 사람에게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법원이 고진수 동지를 구속한 진정한



2025년 12월 30일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이유는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해서이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을 해 왔다. 권력자들은 앞장서 싸워 온 고진수 동지를 구속해 세종호텔 투쟁을 위축시키고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 투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한다.

어제(4월 20일) CU 자본과 그들을

비호한 경찰의 행태 속에 화물연대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일이 벌어진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것도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본과 경찰이 노동자 투쟁에 강경하게 대응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속돼야 할 자들은 땀땀거리며 살고 있는데, 투쟁하는

노동자는 구속돼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부당하다.

최근에 교육부가 진행한 감사에서 세종대학교 재단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 재단의 비리는 계속 드러나고, 노동자 탄압도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말로는 “노동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코로나19를 빌미로 해고됐던 세종호텔 노동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복직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원상 회복시키는 일에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고진수 동지가 해 온 세종호텔 해고 철회 투쟁과 연대 투쟁은 모두 정당한 행동이다. 이를 빌미로 감옥에 가두는 것은 부당하다.

고진수 동지는 감옥이 아니라 세종호텔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 재정 줄이지 말라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교육복지”

서지애 전교조 조합원

최근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교육복지 예산이 '방만 재정'의 주범이라며 이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특히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를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경직성' 예산이 초중고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교육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을 올해부터 30퍼센트로 낮추더니, 지원액을 점차 줄여 일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은 윤석열 정권 때부터 나왔다. 이재

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일 때 고교 무상 교육 등이 국가 책임이라며 국고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빛의 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교육 재정을 대폭 삭감하려 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이 예산 낭비라는 주장은 참말이 아니다.

교육교부금은 약 56퍼센트가 인건비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수준인 저연차 교사 월급, 지난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교사의 실질임금 삭감을 보면, 교육교부금이 남아돈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이다.

더구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약 40만 명(7퍼센트) 감소한 반면, 학교 수는

164교(1.4퍼센트), 학급 수는 1,616학급(0.7퍼센트)이 증가했다. 학급과 교원을 유지해야 하는 신규 택지 개발 지역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전교조 보도자료). 단순히 학령 인구 감소 추세만으로 지금의 교육 현실을 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교육교부금은 노동계급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복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최근에는 특수학급, 기초학력미달 학생, 다문화 학생, 건강장애 학생 등이 늘어나면서, 돌봄이나 학생맞춤형지원 사업과 같은 다양한 복지 기능들이 학교에 확대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감축되면 이런 복지가 축소되거나 질이 나빠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교부금 감축은 결국 교육의 지역 간, 계급 간 격차를 키우고, 노동계급 가정의 사교육비를 늘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교육 재정 감축과 대비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군비 예산 증액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국방비를 7.5퍼센트 늘렸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으로 군사 현대화와 핵잠수함 개발 등 첨단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합의한 대로 국방비를 GDP 3.5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것도 있지만,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 속에서 군사력을 업그레이드해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살벌한 군사력 경쟁을 부추기는데 혈세를 쏟아부으며 노동계급 자녀들을 위한 교육 복지 예산은 삭감하려고 한다.

전교조 등은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과 교육 재정 감축을 비판하고, “무기가 아니라 교육복지”라는 구호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사용자 측은 사악하고 위선적인 공격 중단하라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투명화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4월 23일(목)에 평택 공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5월 21일~6월 7일에는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는 93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투쟁이 다가오자 보수 언론들은 연일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기적인 투쟁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쟁으로 경제가 불안정하고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성과급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훈계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은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 지난해 주식 배당금으로 가져간 돈만 4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의 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재용의 배당금은 올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재용에게 돌아가는 수천억 원은 당연시하면서 노동자가 어떻게 수익원을 성과급으로 챙겨 갈 수 있느냐며 입에 거품을 무는 언론들을 보면, 그들의 계급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삼성전자와 같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투쟁이 노동자 내의 격차를 키우고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비난하는 위선적인 보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그 이익은 기업주에게 돌아간다. 다른 기업주들도 이익을 본다. 이는 계급 간 격차를 더욱 키울 뿐이다.

최근에는 사용자 측은 공격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안전 보호시설 유지·운영”을 위해 조합원들의 23일 집회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냈다. 회사가 정한 143개 파트 소속 노동자 대부분이 집회에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안전”을 핑계로 조합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으



(위)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계속되면서 삼성전자의 첫 과반노조가 됐다
(아래)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승리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것이다

려는 것이다. 노조는 “명절이나 휴일에도” 회사 안전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집회 날만 100퍼센트 근무하라는 것은 “정당한 쟁의권을 막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파업권 공격

또, 사용자 측은 파업에 대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파업에 위법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이번 가처분을 통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협정 근로자”의 범위와 수를 늘리고 싶어 한다. “협정 근로자”는 단협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 측은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통해 그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파업권은

크게 제약될 것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 김재원 정책기획 국장은 이렇게 비판했다.

“생산에 직결돼 있는 근로자도 파업을 못 하면 사실상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법부가 앞장서서 삼성전자에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면 어떤 노조가 투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이닉스 노조도 앞으로 파업 못 하는 거예요.”

정의당 법률위원회는 4월 17일 성명을 내어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가처분 신청은 노동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만약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노동운동 전반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

또, 삼성전자 사용자 측은 일부 노동자가 조합 가입을 설득하기 위해 비조합원 명단을 작성한 것을 두고 고소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노조판 블

랙리스트’라며 사용자 측이 노조원 명단을 작성해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지고 노동자를 탄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용자 측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그런 사용자 측에 맞서 비조합원을 노조로 가입시키기 위해 명단을 작성한 것을 동급에 두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비조합원을 조합에 가입시키기 위해 설득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개인주의를 앞세워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일 뿐이다.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상승하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조합원 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7만 5,500명이 넘었다. 이들은 4월 17일에 과반노조가 됐음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앞으로 조합원 3분의 2를 조직해 유니온숍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도 조합원이 2만 명이 넘는다. 이 두 노조를 합하면 전체 13만 명 노동자 중에 9만 명 이상이 포괄된다.

보수 언론과 사용자 측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힘이 두려워서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한다면 사회(국제적으로도)를 뒤흔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노동자들이 악질적인 노동 탄압을 일삼는 삼성전자 사용자 측에 맞서 승리한다면 이는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큰 자신감을 줄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선영

용어설명

유니온숍

일단 고용된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노동조합 가입 제도. 노동조합의 단결력 유지·강화를 위해 단체협약으로 체결한다